

“비정규직 법·제도가 사람 죽인다. 없애자”

‘1100만 비정규직 촛불 행진’ 열어...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직접 대화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인 근무를 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 동지를 추모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묻기 위해 모였다.

민주노총은 12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1100만 비정규직 촛불 행진’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만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이야기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김용균 동지를 추모하는 시민 2천여 명이 팻말을 들고 종로를 거쳐 청와대 사랑채로 향했다.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투쟁사에서 “노동자가 피를 흘려야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현실이 비극이다. 이 현실이 노동자와 시민이 단결해야 할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신대원 지부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다시 일어나 한국사회의 병든 부위를 도려내고, 사회의 주인으로 살자는 용균이의 유언을 이루자”라고 호소했다. 김용균 동지는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연대사를 통해 “문재인 정



부는 태안화력 특별근로감독에 노조 참여를 막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작업중지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명숙 활동가는 “현장 죽음의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법·제도를 없애야 한다. 불평등한 법·제도가 있는 한 죽음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대회 참가 노동자와 시민들은 김용균 동지의 생전 사진이 담긴 대형 팻말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촛불 행진을 시작했다. 비정규직 대표자 100명은 김용균 동지를 추모하기 위해 하얀 민복을 입고 거리에 나섰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우리가 김용균이다’라는 이름으로 문화제를 열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

화제에서 “태안화력은 인신을 수습하지 않은 채 컨베이어 벨트를 한 시간이나 돌렸다. 단단히 잘못됐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여당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 지난 8월 국회의원들과 태안화력에 갔었다. 국회의원도 이번 죽음의 공범이다”라고 비판했

다.

최준식 위원장은 “한 달 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마리라도 제공했으면 김용균 동지가 죽지 않았다. 대통령도 공범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저지하는 경찰과 맞섰다. 경찰은 마찰 과정에서 김용균 동지의 노동조합인 한전산업개발지부 깃발을 빼앗아가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안전문을 수리하다 사망한 김모 씨의 동료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2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범국민 추모제에 함께했다.

“8년 동안 두들겨 맞았는데 폭력집단이라니...”

노조, 유성기업지회 편파·강압 수사 규탄 결의대회 ... “노조파괴 폭력부터 제대로 수사하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자본 편향 강압·편파 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왜곡·편파 보도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 기해자를 피해자로 둔갑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11월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노사 간 우발 폭력사건을 ‘노동조합 계획범죄’로 몰아갔다. 짜 맞추기 강압 수사 끝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네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수언론은 조합원들이 회사 임원과 관리직을 지난 수년 동안 폭행한 것처럼 왜곡 보도를 쏟아내며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몰았다.

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배임·횡령과 부당노동행위로 유시영 회장과 임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40여 일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경찰과 검찰은 사측이 원인 제공한 우발 폭력을 발미로 조합원들에게 ‘배후를 대다’, ‘구속 못 하면 내가 웃을 뻔했다’라며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12월 21일 충남 천안시



천안지방검찰청 앞에서 ‘검·경 편파, 강압 수사 규탄, 영장기각 촉구,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유시영과 현대차그룹, 창조건설등과 이들이 고용한 용역 강패들이 저지른 잔인한 살인 폭력을 수수방관한 경찰과 검찰은 노조파괴 공범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유성기업 노조파괴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지회 조합원에 대한 신속한 영장청구를 비판

하며 “검찰과 경찰은 법 없이 살 노동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정원영 충남지부장은 “올해 안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다시 머리띠를 동여매고 새로운 각오로 투쟁하자”라고 결의를 높였다.

연대사에 나선 이정아 노조 충남지부 현담산업지회 조직부장은 유성기업처럼 현담지본도 감압장 변호사 출신이 만든 노무법인 LAB파트너스를 끼고 노조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아 조직부장은 “자본이 지난 8년 동안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가한 폭력 때문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라고 분노했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8년 동안 유성 자본과 경찰, 검찰 언론에 매일 맞았다. 검사와 판사는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당한 폭력의 실상을 봤는지”라며 영장청구에 분노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8년 동안 두들겨 맞은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라고 촉구했다.

“정몽구는 교도소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직접교섭 촉구대회 ... “현대차, 14년 동안 조 단위 인건비 떼먹어”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처벌하고,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금속노조는 12월 21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직접교섭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 간접고용 비정규

직으로 시달리는 전국의 금속노동자들이 모였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본을 처벌하라고 검찰청사에서 투쟁을 벌이자 검·경은 즉각 연행했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재벌, 검찰, 정권을 상대로 힘차게 투쟁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고 위협의 외주화르 막자”라고 호소했다.

현대차그룹은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검찰은 현대차그룹의 불법을 처벌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조합원들은 현대차그룹에 정규직화 교섭 참석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준비했지만 경찰과 용역에 가로막혀 전달하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항의서한을 찢어 현대차그룹 본사로 던지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